

# ‘4대강 살리기 사업’ 효과에 대한 시행 지역 주민의 기대심리 분석\*

: 충주지역 주민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ocal Residents' Expectation and Anxiety about the  
Effect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of Korean Government  
: Focused on the Chungju Local Residents

전 영 상\*\* · 현 근\*\*\*

Jun, Young-Sang · Hyun, Keun

## ■ 목 차 ■

- I. 서 론
- II.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이론 고찰
- III. 연구분석틀
- IV. 실증조사와 분석
- V. 결 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 예산낭비 최소화, 지역발전을 위해 시행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와 지지정도,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와 부정적인 역기능에 대한 우려의 정서를 조사·분석하였다. 기대심리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에 대한 기대심리를 조사하였고, 역기능에 대한 우려는 환경파괴와 조세부담 및 복지감소 등에 대한 우려심리를 조사하였다.

빈도분석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단순인지는 확보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

\* 이 논문은 2011학년도 건국대학교 학술진흥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부 행정학전공 SMART연구전임교수(주저자)

\*\*\* 건국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교신저자)

논문 접수일: 2011. 2. 10, 심사기간(1,2차): 2011. 2. 11 ~ 2011. 3. 30, 게재확정일: 2011. 3. 30

한 이해와 지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수준은 낮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의 수준은 높게 나타났다. 집단평균을 비교·분석한 결과 남성은 인지정도가 높고 여성은 지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기대는 고연령집단, 농촌지역 주민, 저학력집단, 고소득자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부정적인 인식과 우려는 저연령집단, 고학력집단, 도시거주자 집단, 중간소득자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라 참여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적 동의와 지지의 확보, 사업시행지역 주민의 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 주제어: 4대강살리기사업, 하천정비, 환경훼손, 생태계 파괴, 지역발전, 주민참여

This paper is to survey and analyze the resident's cognition, the supporting level and the expectation of positive effect and the anxiety of negative effect of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for the efficient performance of the project, the minimization of budget waste and regional development.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e found that the residents of the project-performed area had the simple cognition of the project, but that they had not only insufficient comprehension of detail contents and supporting but also low expectation level of positive effect. Also we found that the male group had the relatively high cognition of the project and the female group had the relatively high supporting. And the highest age, the rural district residents, the low educated group below middle school, and the highest income group had relatively high positive expectation about the project. On the other hand, the lower age group, the higher scholarly group, the urban district residents group and the middle level income group had the relatively high cognition and anxiety about the negative effec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we insisted on receiving the national endorsement and agreement on the basis of residents' participation and policy transparency. Accordingly, we proposed the building of the collaborative local governance.

□ Keywords: Four Major Rivers Restoration Project, River Improvement, Environmental Deterioration, Ecocide, Regional Development, Citizen Participation

## I. 서론

인간의 삶에 있어 물은 생명과 생활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다. 안전하고 충분한 물의 편리한 활용은 모두의 바램이자 인간으로서의 권리이다. 따라서 물관리(治水)는 고대로부터 위정자의 중요한 역할이었다(이병국, 2009). 지금 이명박 정부는 국토의 거의 전역에 흐르는 가장 큰 네 개의 강물을 관리하기 위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수반하는 일대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막대한 국민의 세금이 투자되고 국토의 많은 부분이 변화되는 대역사이다.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은 사업이 미치는 영향의 범위가 전국적이므로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지와 지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은 22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자되고 국토의 상당한 부분에 걸쳐 흐르는 말 그대로 4대 강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따라서 국민적 합의를 형성하고 정책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여 국민적 확신과 지지를 얻어야 한다. 특히 정책사업의 영향이 미치는 지역에서는 자연과 생태·환경 그리고 지역경제 등 많은 영역에서 큰 변화가 예상된다. 따라서 사업 시행 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 아울러 이러한 동의와 지지는 정책사업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동의와 지지의 확보를 위해 정책추진자의 일방적인 주입식 홍보에 의존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주민 대부분이 스스로 지지하고 열망하는 성공적인 정책사업이 될 때 대정부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 총체적인 신뢰의 수준도 향상될 것이며, 지역사회 공동문제 해결을 위한 학습효과도 축적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사업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하다(한경원, 2009; 김선기,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 달성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간의 이해와 조정이 요구된다. 그간 정부가 여러 차례에 걸쳐 관련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이해를 조정하였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이해와 신뢰 수준은 낮은 편이다(한경원, 2009: 35-36). 이명박 정부의 정책추진방식과 관련하여 국민과의 소통보다는 강한 결과주의자(strong consequentialist)적 행태가 지적되곤 한다(이원영·박태현, 2009: 35).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기존에 추진되었던 건설 사업들과 다르다. 자연과 인간의 생태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더 크며, 사업시행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이 더 넓은 반면에 사업의 추진기간이 매우 짧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예산은 우여곡절 끝에 통과되었고 이제 본격적인 집행을 앞두고 있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2011년에 본 사업을 마무리하고 농업용 저수지와 직접 연계사업 등은 2012년까지 마무리 한다는 것이다(국토해양부 외,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과 정책효

과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면밀한 환경에 대한 영향과 경제적 분석에 근거한 사업의 타당성을 국민들에게 확신시켜야 하며, 사업 추진의 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하다(한경원, 2009: 35-36). 특히 대상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참여를 촉진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조사하는 것은 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 낭비를 감소시키는 한편 시행 지역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하고 이를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러한 연구목적의 달성을 위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 지역인 충주시의 주민을 대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 효과에 대한 인식과 기대 그리고 우려의 심리를 조사·분석한다.

## II.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이론 고찰

### 1. '4대강 살리기 사업' 개요

'생명이 깨어있는 강, 새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구호와 함께 한국형 녹색 뉴딜 사업이라며(안시권, 2009: 7),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은 국토해양부, 환경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2009년 6월 8일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확정하였다(국토해양부 외, 2009). 이를 살펴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표는 기후변화의 대비, 자연과 인간의 공생, 지역균형발전과 녹색성장 기반 구축, 국토재창조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5대 핵심과제는 물 부족에 대비하는 풍부한 수자원의 확보, 홍수 예방, 수질 개선과 생태 복원, 주민 생활과 여가를 위한 다기능 복합공간의 마련, 연계사업을 통한 지역발전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2011년 8억<sup>m</sup>, 2016년 10억<sup>m</sup>의 물 부족이 예상되고 있으므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 가뭄에 대비하기 위해 보의 설치, 중소규모 댐의 건설, 농업용 저수지의 증 고 등을 통해 충분한 수자원(총 13.0억<sup>m</sup>)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갈수록 빈발하는 대규모 홍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0년 빈도 이상의 홍수에 대비할 수 있도록 퇴적토 준설, 노후제방 보강, 댐 건설 등을 통해 9.2억<sup>m</sup> 홍수 조절능력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셋째, 하수처리시설 확충과 녹조저감시설 설치 등을 통해 2012년까지 분류 수질을 평균 2급수(BOD 3mg/L 이하) 수준으로 개선하고, 생태하천 및 습지 조성, 농경지 정리 등을 통해 생태를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넷째, 하천을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변화시키기 위해 자전거길 조성,

체험관광 활성화, 산책로·체육시설 등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다섯째, 금수강촌 만들기 사업이다. 문화가 흐르는 4대강 등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인프라와 수변경관을 활용한 다양한 연계사업 추진으로 지역 발전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핵심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사업 내용을 본사업, 직접연계사업, 연계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본사업은 물 확보 및 홍수조절 등을 위해 4대강 본류에 시행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환경부가 시행한다. 직접연계사업은 섬진강 및 주요지류 국가하천(대도시 통과, 다목적댐 하류) 정비와 하수처리시설 등의 확충을 위한 수질개선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계사업은 문화·관광 등 강살리기 효과를 높이기 위한 사업으로 각 부처별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사업기간은 본사업은 2011년까지 완료하고, 댐 및 농업용저수지와 직접연계사업은 2012년에 완료한다는 것이다(국토해양부 외,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총사업비는 22조2천억이며 이중 본 사업비는 16조9천억원이고 직접연계사업비는 5조3천억원이다. 총사업비중 순수건설공사비가 19조4천억원에 이른다(한경원, 2009: 33).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선도사업 지구인 충주지역은 대전청에서 시행하는 7공구(양성 단암 도계~조정지댐) 26.8km와 충청북도에서 시행하는 8공구(충주댐~조정지댐) 18.7km의 2개 공구에서 시행된다. 7공구의 사업은 생태하천 8개 지구, 제방보강 2개 지구, 하도정비 3개 지구, 자전거도로 1개 지구에서 시행된다. 8공구의 사업은 생태하천 4개 지구, 제방보강 2개 지구, 자전거도로 1개 지구에서 시행된다. 직접연계사업으로는 남한강 본류를 대상으로 24개 사업이 시행된다. 이는 국토부 소관 21개 사업(하천환경정비 12, 제방보강 4, 자전거도로 2, 하도정비 3), 농림부 소관 2개 사업(농업용저수지 증 보 2), 환경부 소관 1개 사업(충주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이다. 연계사업은 세계조정대회 경기장과 UN평화공원 등 11개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선도지구 244억원, 7공구 1,120억원, 8공구333억원으로 모두 1,697억원이 투자될 예정이다(충주시, 2010).

## 2.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의 기대효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사업 대상지역의 행정구역간 공유되는 수공간의 발전과 투자활성화 및 이수(利水), 치수(治水), 풍수(豐水), 청수(淸水), 친수(親水)의 강별 5수<sup>1)</sup>의 확보를 통해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도농통합 상생발전을 촉진하는 국토수공간연계형 국토발전 패러다

1) 이수(利水): 강물을 생활용수, 산업용수, 농업용수 등으로 적절히 이용함. 치수(治水): 홍수를 예방함. 풍수(豐水): 강물을 풍족하도록 함. 청수(淸水): 강에 맑은 물이 지속적으로 흐르도록 함. 친수(親水): 강과 사람이 친화할 수 있는 건강, 문화 기반을 마련함(김동주·심우배, 2009).

임(Water-Spatial Synergy)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동주·심우배, 2009).

이러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발전에 미치는 긍정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첫째, 경제활성화와 지역산업발전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대규모 공공투자사업이므로 사업 시행 지역의 지역경제가 활성화와 수공간 연계형 지역산업의 발전을 기대한다. 또한 강변연계 농산어촌 종합지원을 통해 낙후지역과 농산어촌의 지역성장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다(김동주·심우배, 2009; 김선기, 2009: 18; 심원섭, 2009: 26). 둘째, 일자리 창출이다. 4대강 사업의 대규모 공공투자로 인해 시행지역 주민들에게 일자리와 서비스업 창출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한다. 정부는 3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김선기, 2009: 18; 박시현, 2009: 29-30). 셋째, 삶의 질 향상이다. 강을 이용한 특화된 문화와 유적을 복원하고, 자전거기 조성 및 수상 레저 공간의 마련을 통해 여메니티(amenity)를 증가시킴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김동주·심우배, 2009; 김선기, 2009: 18; 박시현, 2009: 29-30).

공공투자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지역생산, 지역소득 창출), 부가가치 유발효과, 임금 소득 유발 효과, 취업유발효과(일자리 창출)의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강별 투자액은 한강 2조3천억원, 낙동강 7조6천억원, 금강 2조4천억원, 영산강 1조6천억원 등으로 추정된다. 이를 윤영선(2009)은 한국은행의 '지역간 산업연관표(2003)'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연구의 충청권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건설투자의 파급효과는 생산유발효과 총 3조3천3백70억원, 건설부분에 유발하는 생산유발액은 2조3천8백30억원이다. 부가가치 유발효과는 1조4천7백억원이며, 충청권내 건설산업부분에 미치는 부가가치 유발액은 1조5백80억원이다. 부가가치유발효과 중 임금소득 유발효과는 충청권에 총8천60억원, 충청권내 건설산업부분에 미치는 임금소득유발액은 6천5백60억원으로 추정된다. 취업유발효과는 충청권내 취업을 유발하는 인원이 총3만3천9백68명이고, 충청권내 건설산업부분에 취업을 유발하는 인원은 2만7천1백74명으로 77.7%이다(윤영선,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부정적인 기대효과에 대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정리하면 첫째, 수질오염과 생태계 파괴 등 환경 문제이다. 4대강에 건설될 16개의 보가 물의 흐름을 저해하고 유속을 느리게 해 강이 호수와 같은 정체 수역이 되고 부영양화가 발생하여 수질이 악화되고, 골재채취와 하도준설과정에서 흙탕물 발생, 강바닥 생물 멸종, 어류의 산란처와 서식처 소멸로 인해 생태계가 파괴된다는 주장이다(민경석, 2010: 37; 박수택, 2010: 73; 박진섭, 2009: 74-80). 둘째, 경제의 부정적인 효과이다. 대규모 예산투자사업으로 인해 지역경제가 일시적으로 활성화되지만, 토목사업 또는 건설업 중심의 산업구조는 장기적으로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점차 고령화되어가는 농촌지역에 건

설업 의존적 경제구조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대규모 예산투자로 인해 일시적 효과는 있으나 오히려 장기적으로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경제구조 개선을 저해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이다(박시현, 2009: 29-30). 셋째, 문화재와 경관 등 훼손의 문제이다.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이 문화와 주민의 일상생활 및 농촌의 생태적 건전성을 고려하지 않고 예산투자 중심의 토목공사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실제 효과가 의심되고, 문화재와 자연경관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주장이다(박시현, 2009: 29-31).

### 3. 선행연구 분석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는 경제적 파급효과, 토목분야와 수질·생태 등 환경분야에서 진행된 몇몇 연구들은 있으나 사업 시행 지역 및 주민과 관련된 연구와 논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에 대한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로는 윤영선(2009)의 연구가 있다. 윤영선은 한국은행의 ‘지역간 산업연관표(2003년도)’를 활용하여 4대강 사업의 강별 투자액 분석을 통해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추정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관련하여 진행한 연구로는 김선기(2009), 심원섭(2009), 이병국(2009), 박시현(2009)의 연구가 있다. 김선기의 연구는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병국은 지방자치단체의 친환경정책과 관련하여 논의를 전개하고 있다. 심원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의 문화·관광 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였고, 박시현은 농촌 및 지역개발 정책과 관련하여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주민차원에서 진행한 연구로는 한경원의 연구(2009)가 있다. 한경원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목적을 지역발전에 초점을 두고 지역발전 효과를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주민참여와 정책지지를 통한 사회적 자본의 축적을 제시하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주민참여를 연구한 논문으로 이원영·박태현의 연구(2009)가 있다. 이원영·박태현은 4대강 사업과 관련된 일련의 정치적 의사결정과정에서 대의주의의 결함이 의심된다고 지적하면서 한국의 국가의사결정시스템에 대한 비판을 전개하고 있다. 특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근거인 국가재정법의 위헌성과 형식적 환경영향평가를 문제시하고 있다.

### Ⅲ. 연구분석틀

Ajzen과 Fishbein(1980)의 이성적 행위모형(theory of reasoned action)에 따르면 행동의지는 개인적인 신념과 주위 사람들의 자기 행동에 대한 인식을 고려하는 주관적 사회 규범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고 있다(한규석, 2003: 223). 따라서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태도는 정책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주변인들의 태도가 반영되어 나타나며 이러한 정책에 대한 태도가 궁극적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순응과 불응의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태도의 구성요소를 인지적 요소(cognitive component), 정의적 요소(affective component), 행동지향적 요소라 할 때(박연호, 2003: 100), 정책에 대한 인식과 정책효과에 대한 기대심리는 개인이 정책적 태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해관계자 개인과 집단의 정책 사업에 대한 인식과 기대심리는 그 정책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 요인이 되고 이러한 정책적 태도를 통해 이해관계자의 순응과 협력의 행위와 불응과 저항의 행위를 예측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아울러 기대심리는 적극적으로 정책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기대감과 정책의 역기능 내지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정책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정책사업에 대한 인식과 기대감 그리고 우려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정책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순응 및 협력의 행동 또는 불응 내지 저항의 행동을 예측하고 순응의 확보와 저항의 예방책을 찾는 것이 정책성공의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논거를 바탕으로 볼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과 예산낭비의 최소화 그리고 시행지역의 경제와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주요 정책 이해관계자인 시행지역 주민들의 정책적 인식과 기대 심리를 조사·분석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시행지역 주민의 인식과 기대심리를 조사·분석하기 위해 기존의 문헌에서 제시된 이론과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연구분석의 틀(〈그림 1〉)과 측정변수 및 측정항목(〈표 1〉)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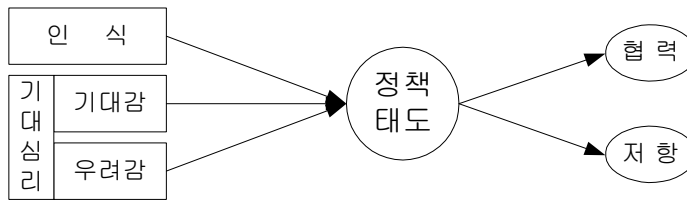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된 시행지역 주민들의 정서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민 인식,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감,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인 피해 내지 역기능에 대한 우려감으로 구분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주민인식은 다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와 지지정도로 나누어 측정하고,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는 다시 지역개발에 미치는 효과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로 구분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피해 내지 역기능에 대한 우려를 다시 환경파괴 등으로 인한 피해와 예산 및 공공·복리 등과 관련된 우려로 나누어 분석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는 사업과 비용에 대한 인지와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



업과 비용에 대한 인지정도를 조사하여 측정한다. 지지정도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지정도와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동의, 건설 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찬성 정도로 측정한다. 사업시행에 따라 기대되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인식 가운데 지역개발분야는 삶의 질 향상,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인구증가,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주민의견을 조사하여 측정한다.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주민의견은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의견과 산업발전, 고용확대,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가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측정한다. 4대강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벗어질 수 있는 부정적 효과 및 피해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환경파괴와 조세부담 및 복지 감소 등으로 조사하여 측정한다. 환경파괴는 환경훼손에 대한 의견과 수질오염, 생태계 파괴, 지역변화, 문화재 훼손 등에 대한 주민의 우려를 조사하여 측정한다. 조세부담 및 복지감소 등은 조세증가에 대한 의견과 예산낭비사업이라는 인식 그리고 공공복지 서비스의 감소에 대한 우려 등을 조사함으로써 측정한다. 조사된 자료는 빈도분석과 응답자 특성에 따른 집단평균 등을 활용하여 분석한다.

<그림 1> 연구분석틀



<표 1> 측정변수와 측정항목

인식조사		긍정적 효과(기대감)		부정적 효과(우려감)	
측정변수	측정항목	측정변수	측정항목	측정변수	측정항목
인지정도	사업인지 비용인지 지역사업인지 지역비용인지	지역개발	삶의 질 향상 SOC 확충 인구증가 교통여건 개선	환경파괴	환경훼손 수질오염 생태계파괴 지형변화 문화재훼손
지지정도	4대강사업 하천정비사업 건설중심국정	지역경제	지역경제활성화 산업발전 고용확대 지자체수입증가	조세부담 복지감소 등	조세부담증가 예산낭비 복지감소

## IV. 실증조사와 분석

### 1. 조사설계와 표본특성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 주민의 조사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정책사업임을 고려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적으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일방적인 선호성향이 강한 지역을 배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정치적인 지역색이 약한 충북 지역을 우선 대상지역으로 하고, 충북지역 가운데 ‘4대강 살리기 사업’과 관련성이 높은 지역을 조사대상지역으로 선정하려 하였다. 충주지역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선도 시행지역이자 대운하 사업 논의 때부터 정책 시행의 중심지였으므로 조사 대상으로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고 충주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sup>2)</sup> 조사기간은 2010년 3월~11월이다. 조사원의 배포와 회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500부 배포하여 288부를 회수하였다.

설문응답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로 남자 127명(44.4%), 여자 159명(55.6%)으로 여성응답자의 비율이 조금 높았다. 연령대별로는 20대 73명(25.4%), 30대 21명(7.3%), 40대 93명(32.4%), 50이상 47명(16.4%)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중졸이하 21명(7.3%), 고졸 121명(42.2%)이고 대졸이상이 145명(50.5%)이다. 거주기간별로는 5년 미만 54명(18.8%), 6~10년이 46명(16%), 11~15년 43명(15%), 16~20년 30명(10.5%), 20년 이상 114명(39.7%)로 조사되었다. 월소득은 100만원 이하 66명(23%), 100~200만원 104명(36.2%), 200~300만원 65명(22.6%), 300~500만원 36명(12.5%), 500만원 이상 16명(5.6%)로 나타났다. 거주지역 별로는 도시지역이 204명(71.6%)이고 농촌지역 81명(28.4%)로 나타났다. 직업별로는 농업 14명(4.9%), 상공업 33명(11.5%), 건설 및 부동산업 31명(10.8%), 전문직 85명(29.7%), 교육직 109명(38.1%), 기타 14명(4.9%)의 분포로 나타났다.

2) 설문조사 기간 중 충주지역에서 실시된 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후보자가 자치단체장에 당선되었고, 여당인 한나라당 소속의 후보자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는 충주지역이 일방적인 정치적 선호성향이 거의 없는 지역임을 재확인하는 근거라 할 수 있다.

<표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별	남자			여자		
	44.4%			55.6%		
연령	20대	30대		40대	50이상	
	25.4%	7.3%		32.4%	16.4%	
학력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7.3%		42.2%		50.5%	
거주 기간	5년 미만	6~10년	11~15년	16~20년	20년 이상	
	18.8%	16%	15%	10.5%	39.7%	
월수입 (만원)	100만 이하	100~200만원	200~300만원	300~500만원	500만원 이상	
	23%	36.2%	22.6%	12.5%	5.6%	
거주 지역	도시			농촌		
	71.6%			28.4%		
직업	농업	상공업	건설·부동산업	전문직	교육직	기타
	4.9%	11.5%	10.8%	29.7%	38.1%	4.9%

## 2. 실증분석

###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 주민의 인식분석

#### (1)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에 대한 인지정도와 시행지역에서 이루어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를 조사하였다.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에 대한 인지정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53.8%이고 부정적인 응답이 26.4%로 나타나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에 대한 인지정도는 긍정적인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용에 대한 인지정도는 부정적인 응답이 67.6%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20.6%로 나타나 인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시행지역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는 부정적인 응답이 65.6%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17.4%로 나타났고, 시행지역 사업비용에 대한 인지정도도 부정적인 응답이 69.8%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13.5%로 나타나 지역사업에 대한 인지수준이 전반적으로 매우 낮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시행지역 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에 대한 단순 인지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사업비용 등에 대한 낮은 인지정도로 볼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과 자

기 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 및 그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해서는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행지역 주민의 인지정도의 집단평균을 비교하면,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에 대한 인지정도는 성별, 연령은 유의수준 0.01 그리고 소득수준은 유의수준 0.1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에 비해 인지정도가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나이가 많을수록 인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수준은 월소득 ‘100만원 이하 집단(3.08),’ ‘100~200만원 집단(3.31),’ ‘200~300만원 집단(3.34),’ ‘500만원 이상 집단(3.50),’ ‘300~500만원 집단(3.81)’ 순으로 높게 나타나 대체로 소득이 많은 집단의 인지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비용에 대한 인지정도는 유의수준이 각각 성별 0.01, 연령 0.05, 소득 0.1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으며, 남성이 여성보다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20대(2.08), 30대와 40대(2.41), 50이상(2.62)으로 나타나 나이가 많은 집단의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은 월소득 ‘100~200만원 집단(2.19),’ ‘100만원 이하 집단(2.24),’ ‘300~500만원 집단(2.53),’ ‘200~300만원 집단(2.55),’ ‘500만원 이상 집단(2.75)’으로 나타나 대체로 저소득층 보다 중산층과 고소득층의 인지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사업인지에 대한 설문에서 연령 20대 집단만이 집단평균 3.0 이하로 나타나 대부분의 집단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에 대한 인지는 어느 정도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 사업비용인지에 대한 집단평균은 모든 집단에서 3.0 이하로 나타나 시행지역 주민집단 대부분이 사업비용에 대한 인지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행지역 주민들에게 있어 4대강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함이 재확인되는 것이다.

지역에서 시행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는 성별과 연령에 따라 유의수준 0.01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이 여성보다 높고 나이가 많을수록 인지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지역시행사업비용에 대한 인지수준은 유의수준이 각각 성별 0.01, 소득 0.05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역시 남성집단과 나이가 많은 집단이 인지 수준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식은 남성과 연장자, 고소득자일수록 인지수준이 높은 반면에 거주지역과 학력에 따른 인식의 차이는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에 대한 인지정도는 집단평균이 3.0이 넘는 집단이 나타나지 않아 전체적인 인지수준이 낮은 것을 알 수 있으며, 지역시행사업 자체보다 지역시행사업비용인지에 대한 각 집단의 평균이 더 낮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가 보다 더 부족한 상태임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행지역 주민의 인지정도 빈도분석(%)

항 목	심한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높은 긍정
사업인지	8.7	17.7	19.8	38.5	15.3
사업비용인지	19.2	48.4	11.8	17.8	2.8
충주사업인지	17.7	47.9	17	15.3	2.1
충주비용인지	26.7	43.1	16.7	11.1	2.4

<표 4> 사업인지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3.54	3.16	2.93	3.26	3.54	3.68	3.36	3.30
N=286, F=7.124, p=0.008		N=287, F=5.405, p=0.001				N=285, F=0.155, p=0.694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3.52	3.37	3.28	3.08	3.31	3.34	3.81	3.50
N=287, F=0.504, p=0.605			N=287, F=2.342, p=0.055				

<표 5> 사업비용인지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61	2.16	2.08	2.41	2.41	2.62	2.41	2.25
N=285, F=12.869, p=0.000		N=286, F=2.733, p=0.044				N=284, F=1.420, p=0.234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1.95	2.40	2.38	2.24	2.19	2.55	2.53	2.75
N=286, F=1.617, p=0.200			N=286, F=2.154, p=0.074				

&lt;표 6&gt; 시행지역사업 인지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54	2.19	2.12	2.24	2.44	2.72	2.40	2.26
N=286, F=8.737, p=0.003		N=287, F=4.043, p=0.008				N=285, F=1.166, p=0.281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05	2.40	2.37	2.30	2.18	2.48	2.61	2.63
N=287, F=1.092, p=0.337			N=287, F=1.940, p=0.104				

&lt;표 7&gt; 시행지역사업비용 인지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43	2.00	2.07	2.12	2.22	2.45	2.20	2.20
N=286, F=12.915, p=0.000		N=287, F=1.441, p=0.231				N=285, F=0.001, p=0.980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00	2.08	2.31	2.15	1.96	2.35	2.50	2.50
N=287, F=2.011, p=0.136			N=287, F=2.960, p=0.020				

## (2)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지정도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에 대한 지지정도는 부정적인 응답이 47.1%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22.8%로 나타나 지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보인다. 토목 및 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지지정도도 부정적인 응답이 46%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25.3%로 나타나 지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건설 중심의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정도 역시 부정적인 응답이 49.8%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20.7%로 나타나 지지정도가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인다. 건설 중심의 국정운영이 지지정도가 가장 낮고, '4대강 살리기 사업' 그리고 토목 및 하천정비사업의 순으로 지지

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시행지역 주민들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설득이 효과적이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행지역 주민의 지지정도에 대한 집단평균을 비교해 보면,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에 대한 지지정도를 보면, 연령은 유의수준 0.01, 거주지역은 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은 20대(2.29)가 가장 낮고 50이상(3.19)이 가장 높은 지지도를 보였고, 30대(2.54)가 40대(2.51)보다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의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 집단평균이 3.0이상인 집단은 50이상의 연령층과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에서만 나타났다. 이들 고연령층과 고소득층을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집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지정도가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토목·하천정비 사업에 대한 지지정도를 보면, 연령은 유의수준 0.01 수준, 거주지역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20대(2.42)가 가장 낮고 50이상(3.17)이 가장 높았다. 30대(2.64)가 40대(2.60) 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농촌주민이 도시주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나이 50이상의 집단만 평균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주민집단의 지지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정도도 연령과 거주지역이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20대(2.30)가 가장 낮고 50이상(2.96)이 가장 높았으며 30대(2.53)가 40대(2.48)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거주지역별로는 농촌 주민들이 도시 주민보다 더 많이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평균이 3.0 이상인 집단이 나타나지 않아 모든 집단에서 ‘건설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정도가 낮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지 정도는 관련된 모든 설문에서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른 집단 분류만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으며, 20대의 지지정도가 가장 낮았고 50이상의 지지가 가장 높았다. 또한 30대가 40대보다 더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도시주민보다 농촌주민의 지지도가 더 높은 것도 공통적이다.

<표 8>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행지역 주민의 지지정도 빈도분석(%)

항 목	심한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높은 긍정
4대강 살리기 사업	22.5	24.6	30.2	18.9	3.9
토목·하천정비사업	17.9	28.1	28.8	20.7	4.6
건설중심 국정운영	20.0	29.8	29.5	18.9	1.8

〈표 9〉 4대강 사업 지지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51	2.62	2.29	2.54	2.51	3.19	2.50	2.75
N=285, F=0.632, p=0.427		N=285, F=6.583, p=0.000				N=283, F=2.943, p=0.087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81	2.61	2.50	2.42	2.63	2.54	2.46	3.19
N=285, F=0.780, p=0.459			N=285, F=1.617, p=0.170				

〈표 10〉 하천정비사업 지지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63	2.68	2.42	2.64	2.60	3.17	2.58	2.88
N=285, F=0.158, p=0.691		N=285, F=4.503, p=0.004				N=283, F=4.057, p=0.045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95	2.71	2.57	2.47	2.83	2.60	2.51	2.94
N=285, F=1.249, p=0.288			N=285, F=1.463, p=0.214				

〈표 11〉 건설중심 국정운영에 대한 지지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52	2.53	2.30	2.53	2.48	2.96	2.44	2.73
N=285, F=0.009, p=0.925		N=285, F=3.800, p=0.011				N=283, F=4.234, p=0.041	



학 력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81	2.54	2.48	2.35	2.63	2.49	2.43	2.94
N=285, F=0.908, p=0.404			N=285, F=1.399, p=0.234				

## 2)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 주민의 기대 심리 분석

### (1)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 정도

지역개발에 대한 기대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응답 가운데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는 부정적인 응답이 45.9%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21.2%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SOC 확충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도 부정적인 응답이 34.1%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26.7%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이 더 많았다. 인구증가에 대한 기대도 부정적인 응답이 45.5%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18.1%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부정적인 응답이 34.8%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30%로 부정적인 응답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개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개발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심리를 집단평균 분석한 결과,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는 연령(유의수준 0.01)과 거주지역(유의수준 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연령은 20대가 가장 낮고(2.44), 50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3.17). 30대(2.66)가 40대(2.57)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도시지역보다 농촌지역 주민의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평균이 3.0이 넘는 집단은 '50세 이상 집단'과 '월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주민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진 것으로 파악되었다.

SOC 확충에 대한 응답에서도 연령은 유의수준 0.01에서, 거주지역과 소득수준은 유의수준 0.05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은 20대(2.53)가 가장 낮고 50이상(3.32)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2.88)가 40대(2.77)보다 조금 높게 나타났다.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긍정적이며, 거주지역은 농촌지역이 도시보다 긍정적인 효과를 더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이 50세 이상 집단,' 농촌지역, '월소득 300~500만원인 집단'과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만 집단평균이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른 주민집단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의 SOC 확충에 기여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인구증가에 대한 기대효과는 거주지역만 유의수준 0.1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모든 집단들의 평균이 3.0 이하로 나타나 인구증가에 대한 기대효과는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모든 주민집단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의 인구증가에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교통여건 개선에 대한 기대효과는 연령(유의수준 0.01), 소득수준(유의수준 0.1)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은 20대(2.63)가 가장 낮고 50이상(2.95)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2.89)가 40대(2.75)보다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을 기준으로 분류해 보면, ‘500만원 이상 집단(3.19)’이 가장 높고, ‘100~200만원인 집단(3.00)’이 다음이며, ‘300~500만원인 집단(2.97),’ ‘200~300만원인 집단(2.74),’ ‘100만원 이하 집단(2.6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 50이상 집단,’ ‘월소득 100~200만원인 집단,’ 그리고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집단’만이 집단평균이 3.0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많은 주민들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교통여건의 개선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표 12>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개발 기여정도 빈도분석(%)

항 목	심한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높은 긍정
삶의 질 향상	11.5	34.4	33.0	18.4	2.8
SOC 확충 기여	11.5	22.6	39.2	24.3	2.4
인구증가	8.7	36.8	36.5	16.7	1.4
교통여건 개선	10.8	24.0	35.2	27.2	2.8

<표 13>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인식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69	2.64	2.44	2.66	2.57	3.17	2.59	2.83
N=286, F=0.240, p=0.624		N=287, F=5.969, p=0.001				N=285, F=3.431, p=0.065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81	2.76	2.55	2.59	2.67	2.57	2.75	3.00
N=287, F=1.748, p=0.176			N=287, F=0.770, p=0.546				

<표 14> SOC 확충 기여에 대한 인식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83	2.82	2.53	2.88	2.77	3.32	2.75	3.05
N=286, F=0.008, p=0.928		N=287, F=6.452, p=0.000				N=285, F=5.493, p=0.020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71	2.91	2.78	2.59	2.95	2.69	3.03	3.12
N=287, F=0.712, p=0.491			N=287, F=2.412, p=0.049				

<표 15> 인구증가 기여에 대한 인식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69	2.62	2.56	2.65	2.58	2.94	2.59	2.80
N=286, F=0.501, p=0.480		N=287, F=1.993, p=0.115				N=285, F=3.242, p=0.073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71	2.77	2.54	2.65	2.68	2.57	2.64	2.81
N=287, F=2.078, p=0.127			N=287, F=0.289, p=0.885				

<표 16> 교통여건 개선 기여에 대한 인식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80	2.91	2.63	2.89	2.75	3.41	2.83	2.95
N=285, F=0.922, p=0.338		N=286, F=6.527, p=0.000				N=284, F=0.844, p=0.359	

학 력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81	2.93	2.81	2.64	3.00	2.74	2.97	3.19
N=286, F=0.486, p=0.616			N=286, F=2.080, p=0.084				

## (2) 지역경제 효과에 대한 기대정도

지역경제에 대한 기대정도를 측정하는 설문에 대한 응답 가운데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정도는 부정적인 응답이 36.6%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23.6%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이 더 높았다. 고용확대에 대한 기대는 부정적인 응답이 34.1%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30.3%로 부정적인 응답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지역산업발전에 대한 기대도 부정적인 응답이 33.8%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23%로 나타나 부정적 응답이 더 높았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부정적인 응답이 33.2%이고 긍정적인 응답이 31.4%로 나타나 부정적인 응답이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에 긍정적 효과를 미칠 것이라는 기대감은 낮은 수준인 것으로 파악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경제에 미칠 긍정적 효과에 대한 기대심리를 집단평균 분석한 결과,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기대는 거주지역(유의수준 0.01)과 학력(유의수준 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거주지역은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기대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은 높을수록 기대수준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평균 3.0 이상의 응답은 '나이 50이상 집단,' '농촌지역 주민집단,' '중졸 이하의 학력 집단,'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집단'에서만 나타났다. 따라서 저학력, 농촌지역 거주, 고연령층과 고소득층 집단에서만 지역경제활성화 효과에 대한 기대가 긍정적이며, 이외의 주민집단들은 기대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고용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문에 대한 응답을 집단평균 분석한 결과 모든 집단분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고용확대에 대한 기대는 집단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집단평균 3.0 이상은 '연령 30대인 집단,' '농촌지역 주민집단,' '학력이 중졸이하인 집단,' '월소득 300~500만원인 집단'과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나타났다. 따라서 고용확대에 대한 기대는 지역경제활성화와 달리 농촌지역 주민과 저학력자, 고소득층 외에 30대 연령층과 중산층인 월 300~500만원 소득집단에서도 기대가 긍정적인 것으로 보인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지역산업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집단평균을 비교

한 결과, 연령(유의수준 0.1), 학력(유의수준 0.1)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50대 이상(3.105)이 가장 높고 다음이 20대(2.82), 30대 (2.77), 40대(2.74)로 50이상을 제외하고는 나이가 많을수록 기대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보다 농촌지역이 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평균이 3.0 이상인 집단은 나이 50이상, 농촌지역, 월소득 500만원 이상인 집단에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이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에 대한 집단평균을 비교하였다. 연령과 소득수준이 유의수준 0.05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은 50이상(3.37)이 가장 높고, 20대(2.92) 30대(2.91), 40대(2.87)의 순으로 크게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500만원 이상 집단(3.25)’이 가장 높고 다음이 ‘100~200만원 집단(3.15),’ ‘300~500만원 집단(3.03),’ ‘100만원 이하 집단(2.91),’ ‘200~300만원 집단(2.66)’의 순으로 기대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평균이 3.0 이상인 집단은 여성집단, 나이 50이상 집단, 도시지역 주민집단, 고졸학력자 집단, 월평균 300~500만원의 소득자 집단과 500만원 이상의 소득자 집단이다.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층은 지역경제 관련 4개 설문에 집단평균 3.0 이상의 응답을 보였으며, 50이상의 연령층은 고용확대를 제외한 3개 설문에서, 농촌지역 주민은 지방자치단체 수입 증가를 제외한 3개의 설문에서 집단 평균 3.0 이상의 응답을 보였다. 고용확대에 대해서는 30대 연령층이,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가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주민이 집단평균 3.0 이상의 응답을 나타냈다.

<표 17>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기여정도 빈도분석(%)

항 목	심한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높은 긍정
지역경제활성화	9.1	27.5	39.7	23.3	0.3
고용확대	7.7	25.1	36.9	28.9	1.4
지역산업발전	7.3	26.5	43.2	20.6	2.4
지자체수입증가	5.2	28.0	35.3	26.9	4.5

<표 18>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한 기대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83	2.75	2.79	2.73	2.70	3.02	2.68	3.04
N=286, F=0.513, p=0.475		N=287, F=1.411, p=0.240				N=285, F=8.901, p=0.003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3.10	2.86	2.68	2.76	2.78	2.68	2.94	3.00
N=287, F=2.657, p=0.072			N=287, F=0.730, p=0.572				

<표 19> 고용확대에 대한 기대 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90	2.91	2.82	3.04	2.85	2.94	2.85	3.05
N=285, F=0.018, p=0.893		N=286, F=0.834, p=0.476				N=284, F=2.643, p=0.105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3.19	2.80	2.95	2.83	2.94	2.74	3.08	3.25
N=286, F=1.882, p=0.154			N=286, F=1.522, p=0.196				

<표 20> 지역산업발전에 대한 기대 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79	2.88	2.82	2.77	2.74	3.15	2.76	3.04
N=285, F=0.764, p=0.383		N=286, F=2.361, p=0.072				N=284, F=5.431, p=0.020	

학 력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90	2.85	2.81	2.74	2.95	2.63	2.97	3.00
N=286, F=0.125, p=0.883			N=286, F=1.792, p=0.131				

<표 21> 지방자치단체 수입증가에 대한 기대 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2.90	3.03	2.92	2.91	2.87	3.37	3.00	2.93
N=284, F=1.198, p=0.275		N=285, F=3.171, p=0.025				N=283, F=0.297, p=0.586	
학 력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90	3.05	2.92	2.91	3.15	2.66	3.03	3.25
N=285, F=0.670, p=0.513			N=285, F=2.995, p=0.019				

### 3)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 주민의 우려 심리 분석

#### (1)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정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환경 파괴가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우선,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응답이 58.6%이고 우려하지 않는 응답이 16.4%로 나타나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수질오염을 우려하는 응답도 52.6%이고, 우려하지 않는 응답이 20.6%로 나타나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가 더욱 큰 것으로 보인다. 생태계 파괴를 걱정하는 설문에서도 우려하는 응답이 56.1%, 우려하지 않는 응답이 14.6%로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지형변화를 초래할 것인가를 묻는 설문에서도 지형변화를 예견하는 응답이 50.1%, 변화에 대한 부정적 응답이 20.2%로 나타나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지형변화가 초래될 것으로 생각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는 응답이 44.6%인데 우려하지 않는 응답이 23%로 나타나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는 응답이 더 많았다. 따라서 ‘4대강 살리

기 사업'의 시행지역 주민들도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환경과 자연의 파괴 그리고 문화재의 훼손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는 소리가 더 큰 것으로 분석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환경파괴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의 정도를 집단평균으로 비교하였다.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정도는 연령과 학력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연령은 50이상(3.04)이 우려 정도가 가장 낮았으며, 20대(3.60), 30대(3.69), 40대(3.78)로 20대~40대까지는 나이가 많을수록 우려의 정도가 높아졌다. 학력은 수준이 높아질수록 우려의 정도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정도도 연령과 학력이 유의수준 0.01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역시 연령은 50이상(2.83)이 가장 낮았고 20대(3.48), 30대(3.55), 40대(3.62)로 20대~40대는 연령이 높을수록 우려정도가 높았다. 학력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려 정도도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수준이 중졸이하 집단'만이 집단평균 3.0 이하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주민집단이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환경훼손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는 학력이 유의수준 0.01, 연령과 소득은 유의수준 0.1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의 수준은 높아질수록 우려의 정도가 높았다. 연령은 50이상(3.23)의 우려 정도가 가장 낮았고 20대(3.68), 30대(3.70) 40대(3.72)로 20대~40대는 연장자 집단일수록 우려의 정도가 높게 나타났다. 월소득은 '500만원 이상의 집단'이 가장 낮았고(3.31), '월소득 100만원 이하 집단(3.38), '200~300만원 집단(3.65), '100~200만원 집단(3.73), '300~500만원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로써 '월소득 500만원 이상 집단'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정도도 심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수준 중졸 이하 집단'만이 집단평균 3.0 이하로 나타나 대부분의 주민집단이 생태계 파괴에 대해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형변화에 대한 우려 정도는 연령과 학력이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20대가 가장 높았고(3.59), 40대(3.49), 30대(3.41), 50이상(2.96)의 순으로 50이상을 제외하고 나이가 적을수록 높은 우려를 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학력은 수준이 높을수록 우려의 정도도 높아졌다. '나이 50이상 집단'과 '학력 중졸이하 집단'만이 집단평균 3.0 이하로 나타나 그 이외의 주민집단들은 모두 지형변화를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 정도는 학력(유의수준 0.01), 연령(유의수준 0.05), 거주지역(유의수준 0.1)에서 의미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학력은 높을수록 우려의 정도가 높았다. 거주지역은 도시 주민이 농촌지역 주민보다 우려의 정도가 높았다. 연령은 30대(3.49), 20대(3.36), 40대(3.33), 50이상(2.9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나이 50이상 집단'과 '학력 중졸이하 집단'만이 집단평균 3.0 이하로 나타나 그 이외의 주민집단들은 모두 문화재 훼손을 우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 학력과 연령은 환경파괴와 관련된 설문 모두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력수준 중졸 이하의 집단도 환경파괴에 대한 모든 설문에서 집단평균 3.0 이하의 응답을 보였다. 연령 50대 이상의 집단은 수질오염, 지형변화,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 정도에서 3.0 이하의 집단평균을 보였다.

<표 22>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환경파괴 우려정도 빈도분석(%)

항 목	심한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높은 긍정
환경훼손	2.8	13.6	25.1	38.7	19.9
수질오염	3.5	17.1	26.8	37.3	15.3
생태계파괴	3.1	11.5	29.3	31.7	24.4
지형변화	3.1	17.1	29.6	36.2	13.9
문화재훼손	3.5	19.5	32.4	31.4	13.2

<표 23> 환경훼손에 대한 우려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3.54	3.63	3.60	3.69	3.78	3.04	3.66	3.44
N=286, F=0.572, p=0.450		N=287, F=5.952, p=0.001				N=285, F=2.420, p=0.121	
학 력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86	3.51	3.77	3.45	3.72	3.52	3.67	3.44
N=287, F=7.988, p=0.000			N=287, F=0.894, p=0.468				

<표 24> 수질오염에 대한 우려 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3.39	3.47	3.48	3.55	3.62	2.83	3.49	3.32
N=286, F=0.471, p=0.493		N=287, F=6.944, p=0.000				N=285, F=1.408, p=0.236	

학 력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90	3.30	3.63	3.35	3.50	3.43	3.44	3.44
N=287, F=6.547, p=0.002			N=287, F=0.208, p=0.934				

<표 25> 생태계 파괴에 대한 우려 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3.54	3.69	3.68	3.70	3.72	3.23	3.69	3.48
N=286, F=1.516, p=0.219		N=287, F=2.589, p=0.053				N=285, F=2.123, p=0.146	
학 력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90	3.45	3.88	3.38	3.73	3.65	3.89	3.31
N=287, F=11.008, p=0.000			N=287, F=2.054, p=0.087				

<표 26> 지형변화에 대한 우려 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3.35	3.45	3.59	3.41	3.49	2.96	3.42	3.38
N=286, F=0.648, p=0.422		N=287, F=4.128, p=0.007				N=285, F=0.063, p=0.802	
학 력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71	3.36	3.54	3.33	3.50	3.29	3.47	3.44
N=287, F=6.433, p=0.002			N=287, F=0.538, p=0.708				

<표 27> 문화재 훼손에 대한 우려 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3.28	3.35	3.36	3.49	3.33	2.94	3.38	3.15
N=286, F=0.321, p=0.572		N=287, F=2.847, p=0.038				N=285, F=2.937, p=0.088	
학 력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62	3.23	3.48	3.06	3.38	3.49	3.36	3.06
N=287, F=7.275, p=0.001			N=287, F=1.849, p=0.120				

(2) 조세부담·복지감소 등에 대한 우려 정도분석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조세 증가 내지 공공 복지 서비스 등의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정도를 측정하였다. 우선,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세금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감을 나타낸 응답이 64.3%, 우려하지 않는 응답이 10.8%로 나타나 세금이 증가할 것을 우려하는 정서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예산낭비사업이라는 인식에 대한 응답이 46.9%인데 예산낭비가 아니라는 응답이 23.4%로 나타나 예산낭비라는 인식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사업으로 인해 공공 복지 서비스가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우려하는 응답이 56.3%이고 우려하지 않는 응답이 12.9%로 나타나 공공 복지 서비스의 감소를 우려하는 정서가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시행지역 주민들은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세금 증가와 공공 및 복지 서비스가 감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고 예산낭비사업이라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세금 증가와 공공 복지 서비스 감소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의 정도를 집단평균 비교한 결과, 조세 증가에 대한 우려 정도는 거주지역과 학력이 유의수준 0.1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도시주민이 농촌주민들보다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을수록 우려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낭비사업이라는 인식은 학력이 유의수준 0.01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역시 학력이 높을수록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예산낭비사업이라는 인식이 높았다. 공공 복지 서비스 감소에 대한 우려 정도는 학력이 유의수준 0.05에서 의미있는 차이를 보였다. 대졸이상이 가장 높았고(3.82) 중졸이하와 고졸학력 집단은 같은 수준의 우려감을 표시하였다(3.48). 또한 학력수준의 차이는 세금 증가

및 공공 복지 감소 등에 관한 설문 모두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집단평균 3.0 이하는 예산낭비사업이라는 인식에 대한 '학력수준 중졸 이하의 집단(2.81)'에서만 나타나 이외의 모든 주민집단의 평균이 3.0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8>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한 조세증가·복지감소 우려정도 등 빈도분석(%)

항 목	심한 부정	부정	보통	긍정	높은 긍정
세금증가	2.4	8.4	24.8	43.7	20.6
예산낭비사업	4.9	18.5	29.7	26.6	20.3
공공복지서비스 감소	1.7	11.2	30.8	32.9	23.4

<표 29> 조세증가에 대한 우려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3.63	3.78	3.66	3.81	3.83	3.45	3.78	3.56
N=285, F=1.673, p=0.197		N=286, F=1.960, p=0.120				N=284, F=3.041, p=0.082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3.43	3.62	3.84	3.65	3.81	3.65	3.78	3.56
N=286, F=2.753, p=0.065			N=286, F=0.515, p=0.725				

<표 30> 예산낭비사업이라는 인식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3.43	3.37	3.47	3.47	3.37	3.22	3.46	3.24
N=284, F=0.203, p=0.652		N=285, F=0.617, p=0.604				N=283, F=2.248, p=0.135	
학 령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2.81	3.25	3.60	3.43	3.45	3.38	3.39	3.00
N=285, F=6.414, p=0.002			N=285, F=0.548, p=0.700				

<표 31> 공공 복지 서비스 감소에 대한 우려 정도 집단평균 분석

성 별		연 령				거주지역	
남	여	20대	30대	40대	50이상	도시	농촌
3.60	3.68	3.62	3.74	3.73	3.40	3.69	3.58
N=285, F=0.497, p=0.482		N=286, F=1.343, p=0.261				N=284, F=0.757, p=0.385	
학 력			월소득(단위: 만원)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	100 이하	100 ~200	200 ~300	300 ~500	500 이상
3.48	3.48	3.82	3.64	3.63	3.68	3.75	3.50
N=286, F=4.121, p=0.017			N=286, F=0.196, p=0.940				

### 3. 분석결과에 대한 논의의 종합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시행 지역 주민들의 기대와 우려에 대한 인식을 조사·분석한 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단순한 인지는 어느 정도 확보되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와 정책적 지지는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는 정서를 살펴본 결과 평균 3.0 이하로 기대 수준이 낮은 상태임을 알 수 있었다. 지역개발분야보다 지역경제 분야에 대한 기대가 조금 더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인해 빚어질 수 있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우려의 정도는 모든 설문에서 평균 3.0이상으로 나타나 역기능에 대한 우려정도가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집단평균 비교를 통해 전반적인 추세를 분석해 보면, 남성집단이 여성집단보다 인지정도는 높으나 지지정도는 낮은 것으로 보인다. 또한 남성집단이 기대가 크고 여성집단이 우려가 큰 것으로 보인다. 연령이 높을수록 인지와 지지정도가 높고 기대가 크며 우려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거주지역별로는 도시지역 주민집단이 농촌지역 주민집단에 비해 인지정도는 높으나 지지정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기대는 낮으나 우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이 높은 수준의 집단일수록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단순인지는 상대적으로 낮고 구체적 내용에 대한 이해수준은 높으며, 지지정도와 기대수준은 낮아지고 우려수준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수준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식정도를 살펴보면, 인지정도는 대체로 월소득이 높을수록 높아지고, 지지정도와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는 ‘500만원 이상 집단’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중간소득 집단들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정도는 중간소득계층이 가장 높으며, 환경파괴에 대한 우려는 '100만원 이하의 소득집단'과 '500만원 이상의 소득집단'이 비슷하며, 조세·복지 감소 등에 관한 우려는 '500만원 이상의 소득집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평균 비교결과 통계적 유의미성이 나타난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와 관련된 모든 설문에서 성별에 따라 분류된 집단들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지지정도에 관한 모든 설문에서 연령과 거주지역에 따라 분류된 집단들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파괴와 관련된 모든 설문항목에서 연령과 학력을 기준으로 분류된 집단들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조세·복지관련 설문항목에서는 학력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집단들의 평균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집단평균 비교를 위해 분류기준으로 적용된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들의 평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이 발견된다. 학력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집단 가운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집단들의 평균은 학력이 높을수록 기대가 적어지고 우려가 작아지는 특성이 나타났다. 아울러 학력수준이 '중졸이하인 집단'과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집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도와 지지도 수준이 높고, 기대가 크며,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지역을 기준으로 볼 때 도시지역 주민들보다 농촌지역주민들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지도가 높고, 기대가 크며, 우려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을 기준으로 나누어진 집단들 가운데 '50이상의 집단'은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지정도와 지지정도가 가장 높고, 기대가 가장 크며, 우려가 가장 낮은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에 20대는 인지과 지지정도 및 기대가 낮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대가 40대 보다 조금 더 지지수준과 기대수준이 높고 우려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30대가 40대 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인식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월소득 수준에 따른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인식은 월소득 500만원 이상의 고소득집단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반면, 중간소득집단은 지지와 기대가 낮고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전반적으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와 지지, 그리고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심리가 부족하고 역효과에 대한 우려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책에 대한 일반적인 비판의 여론을 극복할 수 있는 정부의 적극적인 설득과 소통의 노력에 문제가 있음을 나타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기대는 고소득, 고연령, 저학력, 농촌지역 주민집단을 중심으로 한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한 정치적 선호성향과 일치한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과 긍정적인 기대를 바탕으로 하는 지지라기보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한 일방적인 선호라고 해석된다. 따라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시행지역 주민을 중심

으로 볼 때 정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협력의 기반이 부족한 상태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 V. 결 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효율적 집행과 예산낭비의 최소화 및 시행 지역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사업효과에 대한 시행 지역 주민의 기대심리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지지와 기대는 농촌지역, 저학력, 고연령, 고소득층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적 지지계층인 보수층의 정서에 기반하고 있으며, 그 외의 집단에게는 지지가 낮고 기대보다 우려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특히 우리사회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중간소득계층의 우려감이 크고, 우리의 미래인 저연령층에서 기대가 낮고 우려가 큰 것은 ‘4대강 살리기 사업’이 누구의 지지를 기반으로 해야 하며, 누구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인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시행지역 주민들에게 정책적 이해와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것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대민홍보와 설득의 노력에 문제가 있음을 입증한다. 이해관계집단의 지지가 없는 정책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리고 사업의 완공시기를 2년 내로 정하고 추진되고 있다는 사실은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이해, 명확한 논리와 필요성의 제기를 통해 국민적 동의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일방적인 주입식 홍보만으로는 고학력, 저연령, 중간소득의 도시거주자들을 설득하기는 어렵다.

특히, ‘4대강 살리기 사업’은 우리 국토의 변화를 꾀하는 사업이며,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따라서 대대로 지역에서 삶을 꾸려가야 할 지역 주민의 동의와 지지가 없는 사업은 그 의미를 찾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시행지역 주민의 동의와 지지를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감시가 필히 수반되어야 한다. 조사·분석결과 나타난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결론은 이러한 주민의 참여가 논의과정에서부터 배제되었거나 형식화되었기 때문이다.

국민적 지지와 동의가 확보되지 않고 시행 지역 주민의 참여가 배제된 상태에서 밀어부쳐지는 사업의 시행은 효율적 집행과 시행지역의 발전을 이루기 어렵고 예산낭비를 초래하기 쉽다. 현 정부가 지적받고 있는 국민과의 소통문제와 결과중심적인 정책운영방식 그리고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넓은 범위와 짧은 시행기간은 이러한 정책실패를 더욱 독촉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참여와 투명성을 바탕으로 국민의 지지와 동의를 확보해야 하며, 지지와 참여의 확보를 위한 노력은 국가와 지역차원에서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상대적이지만 긍정적인 효과에 대한 기대 가운데 고용확대와 지역산업 발전에 대한 기대가 가장 크고, 부정적인 효과에 대한 우려 가운데 세금 증가와 환경 및 생태계 훼손에 대한 우려감이 가장 크다는 점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국가차원에서 생태·환경의 안전성과 조세 증가에 대한 국민적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는 전략적인 설득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써 전국적 범위의 공중과 방송을 활용하여 과학적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하는 대국민 토론회를 단계적이고 지속적으로 개최하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으며, 이러한 국정홍보기능을 총괄하고 논리적 일관성과 설득의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국정홍보기구의 부활이 요구된다.

지역차원에서는 ‘4대강 살리기 사업’을 계기로 시행지역의 산업발전과 고용확대를 위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대안이 제시·시행되어야 한다. 이의 실천방안으로서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행과정에 지역 주민과 기업, 지역 학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구축이 제시될 수 있다. ‘4대강 살리기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을 통한 지역산업의 발전과 주민 일자리 창출이 정책 사업의 결실을 공유하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틀로 형성될 때 ‘4대강 살리기 사업’의 결과는 장기화·토착화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정책사업의 전 과정에 대한 여과없는 참여와 참여자의 적극적 노력이 필수적이다.



## 【참고문헌】

- 국토해양부, 환경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식품부. (2009). 2009년 6월 8일자 보도자료
- 민경석. (2010). 4대강 살리기 성공전략. SAPA News & Platform SAPA News & Platform. 서울행정학회, 제16권
- 권오현·윤영선.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주요 내용과 파급효과. 『건설이슈포커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김동주·심우배. (2009). 4대강 살리기와 새로운 지역발전. 『국토정책』, 2009년 6월호(통권 234).
- 김선기. (2009). 4대강 살리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 4대강 살리기와 지자체 역할 및 과제. 『지방행정』, 제58권(통권 669).
- 박수택. (2010). 21세기 하천관리의 관점에서 본 ‘4대강 살리기’ 사업. 『한국환경보전학회지』, 36(2)
- 박시현. (2009). 4대강 살리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 4대강 살리기와 지자체의 농촌, 지역 개발 정책. 『지방행정』, 제58권(통권 669).
- 박연호. (2003). 『조직행동론』. 서울: 박영사.
- 박진섭. (2009). 토건 파시즘의 압축판, 4대강 정비 사업: 기어이 죽음의 육조를 만들려는가? 『환경과 생명』, 2009년 가을호(통권 61).
- 박창근. (2009).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 『경제와 사회』, 2009년 가을호(통권83호).
- 심원섭. (2009). 4대강 살리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 4대강 살리기와 지자체의 문화, 관광 정책. 『지방행정』, 제58권(통권 669).
- 안시권. (2009). 4대강 살리기 마스터플랜. 『국토』, 2009년 8월호(통권 334).
- 윤영선. (2009).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지역경제 파급효과. 『부동산 포커스』, 제9권.
- 이병국. (2009). 4대강 살리기와 지방자치단체의 대응방안 : 4대강 살리기와 지자체 친환경정책. 『지방행정』, 제58권(통권 669).
- 이원영·박태현. (2009). 대의민주주의 원리로 본 4대강사업의 문제점. 『국토계획』, 44(7).
- 충주시. (2010).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상황 보고』.
- 한규석. (2003). 『사회심리학의 이해』. 서울: 학지사
- 한경원. (2009). 4대강 살리기와 주민참여. 『국토』, 2009년 8월호(통권334)
- Ajzen, I., & Fishbein., M. (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